

A Critical Essay on ‘new cold war’ Discours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cold peace’

Jun-Kee BAE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currently controversial 'new cold war' discourse. It took three triggers for the 'new cold war' discourse to emerge as a major issue in the media and academia and to have real political impact. With the launch of China's 'Belt and Road' project and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leading to the 'Ukraine crisis,' the 'new cold war' discourse has begun to take shape. Trump's U.S.-China trade spat has brought the 'new cold war' debate to the forefront. The 'new cold war' debate is currently being intensifi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framing of "democracy versus authoritarianism" and Putin's invasion of Ukraine.

Currently, there is no consensus among scholars on whether the controversial 'new cold war' is a new version, or a continuation of the historically defined concept of the Cold War. The term 'New Cold War' is less of an analytical concept and more of a topical term that has yet to achieve analytical status, let alone a theoretical validation and systematization, and the related debate remains at the level of assertion or discourse.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I will argue that the ongoing discourse of the 'New Cold War' does not have the instrumental explanatory power to analyze the transitional phenomena of the world order today.

Keywords

new cold war, US-China decoupling, US-Russia rivalry, US-China rivalry, Ukraine War.

* Jun-Kee BAEK,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shin University.

E-mail: jkbek99@gmail.com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백준기*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요 약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주제어

신냉전, 미중디커플링, 미러전략갈등, 미중패권경쟁, 우크라이나전쟁

* 백준기,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이메일: jkbek99@gmail.com

I. 서론

‘신냉전’이라는 유명이 떠돌고 있는가? 오늘도 뉴스 미디어에는 ‘신냉전’ 관련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고, 구글 검색(2023년 9월 8일 기준)에서는 약 11억 9천만 여 건의 ‘신냉전’ 관련 콘텐츠를 보여준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과거의 냉전이 소련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소련간의 양자 대결 구조였다면, 현재의 ‘신냉전’ 담론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삼국의 관계 구조와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에서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이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영어 소문자(cold war)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냉전’이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반 따옴표(‘신냉전’)와 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신냉전’에 관한 현재의 논쟁이 이론적 배경이나 학술적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론에 가까운 것으로 가정하고, 이론적 분석보다는 담론의 ‘정치적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첨언하면, 과거 20세기 냉전에 관한 당대의 연구 또한 냉전에 대한 개념 정의, 또는 그 이론적 구조나 체계 연구 보다는 냉전의 기원과 책임론이나 경로 등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냉전연구가 역사

학의 주요 범주에 속했던 사실은 냉전연구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학에서 냉전연구의 접근법이 정통주의와 수정주의로 대별되는 것도 연구의 주요 방향과 방법이 냉전의 기원과 책임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용어가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방법론적 정치(精緻)함보다는 논쟁의 정치적 적실성 측면에 주목하여 정책적 함의를 시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음을 재차 밝혀둔다.

이 글의 본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주로 미국의 미디어와 정책커뮤니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 관련 논쟁의 양상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냉전’ 담론이 학술 수준의 담론만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동력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신냉전’ 담론을 생성하고 지지하는 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들과 이에 대한 학계의 반론을 비교함으로써 ‘신냉전’ 담론이 처해 있는 매우 경쟁적이고 유동적인 상황, 부연하면, 이론적 구체성은 물론이고 적실성 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상황을 드러낼 것이다. IV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실재한 20세기 냉전(Cold War)과 비교할 때, 현재 운위되고 있는 ‘신냉전’이 어떠한 유사한 속성과 상이성이 있는지 변별하여, 학문과 현실정치에서 이미 합의된 개념인 기존의 〈냉전〉의 새로운 버전인지, 명실상부한 ‘신’ 냉전이라 정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냉전해체기에 형성된 ‘승리주의(triumphalism) 담론’이 ‘신냉전’ 담론과 어떠한 기원적 연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냉전’ 담론의 리스크를 진단 할 것이다.

II. ‘신냉전’ 담론 경쟁의 정치적 양상

트럼프정부 시기 무역분쟁을 필두로 한 미-중 간 전면적 대립이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으로 표출됨에 따라 미디어와 정책커뮤니티에서 ‘신냉전’에 관한 논쟁이 점화되었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의 전문가 논쟁을 살펴보면,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거시전략분석가인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의 기고문에서 중국과의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쟁투에 간헐 것이고, 중국보다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는 일찍이 2005년 6월 《아틀란틱*Atlantic*》의 커버스토리에 기고한 글에서 ‘신냉전’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21세기 미중 간의 ‘신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구 냉전’보다 더 치열하고 근본적이며, 영구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Kaplan, 2019, January 07).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또한 중국과의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산업과 기술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의 양상, ‘중국의 안보위협이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경고하였다.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산하 〈스콧크로프트(Scowcroft) 전략안보센터〉의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도, ‘기술탈취, 불공정무역 등을 포함한 중국의 도전은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적 도전’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동맹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Ashford & Kroenig, 2020, July 31).

이 밖에,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핵심정책으로 궤도에 오르는 2018년을 계기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Post*》, 《블룸버그*Bloomberg*》, 《디플로매트*The Diplomat*》, 《포춘*Fortune*》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신냉전’을 경고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하버드대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2019년 12월 2일자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상대는 중국’이라고 확정한 바 있다.¹⁾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총

리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투쟁’이라는 담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Ukrainian war)〉이 ‘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사태가 아니라, ‘자유 대 억압’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수반한 ‘유럽전체의 투쟁’에 관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신냉전’에 부정적인 견해들도 언론 매체에 경쟁적으로 게재되었다. ‘신냉전’ 개념의 일상적 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라고 전제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행위와 언술을 ‘신냉전’이라 연역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발생론적 오류(gene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이자 칼럼리스트인 카라벨 등은 ‘신냉전’ 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자카리 카라벨(Zachary Karabell)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관계(냉전)를 현재 미중관계에 무리하게 적용하려한다는 의미에서, ‘신냉전 담론이 20세기 냉전의 주형(鑄型, template)을 강요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제재와 보복은 치열하고 ‘말의 전쟁(war of words)은 뜨거우나 냉전은 아니다’. 그는 ‘양국의 경제관계는 역사상 어느 거대국가보다 밀접한 상호연계성으로 직조되어’ 있어서 완전한 분리결별(decoupling)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디커플링과 봉쇄를 의미하는 ‘신냉전’을 주장하는 것은 ‘종이화살(paper arrows)’을 날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마 애쉬포드(Emma Ashford)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면화된 ‘미중 충돌’이 ‘신냉전’의 시작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된다

-
- 1) 이와 관련한 주요 기사 및 칼럼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Clay Chandler, Eamon Barrett, “The US-China Cold War Has Begun”, *Fortune*, October 6, 2018; Ishaan Tharoor, “Under Trump, US Enters a New Cold War with China”, *Washington Post*, October 10, 2018; Hal Brands, “America’s Cold Warriors Hold the Key to Handling China”, *Bloomberg*, January 14, 2019; Niall Ferguson,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New York Times*, December 2, 2019; Steven Lee Meyers, Paul Mozur, “Caught in ‘Ideological Spiral’, US and China Drift toward Cold War”, *New York Times*, July 14, 2020; Francis P. Sempa, “Forget about a ‘New’ Cold War, The Old One Never Ended”, *Diplomat*, May 27, 2020; Chen Xiangmiao, “The US ‘New Cold War’ Battle Cry in the South China Sea”, *Diplomat*, August 17, 2020.

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의 도전은 세력(power)에 관한 것이지 이념에 관한 것은 아니고 중국의 도전은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냉전’이라는 유추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처럼 중국을 냉전시대 약칭인 ‘중공(中共,Chicom)’으로 호칭하면서 과거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대결 담론을 다시 호출하는 행위는 ‘신냉전’을 의제적으로 주조하는 효과를 거뒀던 것이다(Karabell, 2020; Ashford & Kronig, 2020).

이 외에도, ‘신냉전’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국가정보국(NI)>의 전임국장 댄 코츠(Dan Coats)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현재의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적용하는 것은 개념적 오류이며, 중국과 냉전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클린턴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찰스 프리먼(Charles/Chas Freeman)도 2020년 9월 <아시아-아메리카 포럼(Asia America Forum)>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냉전적 대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립대의 정치학자 존 물러(John Mueller)는 ‘전면전이나 ‘신냉전’에 대한 두려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위협론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Mueller, 2020, pp.115-136).²⁾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 냉전’에 관한 합의된 견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과거 우리가 지나온 <냉전(Cold War)>과는 다르게, 정작 ‘대결하는 국가들(rivalries)’ 간에 ‘신냉전’이라는 시대 규정에 동의가 부재하다. 대체로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신냉전’의 도래를 말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신 냉전’의 출현에 부정적이다. 글로벌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치엘리트들도 ‘신냉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조라 할 수 있는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러시아의

2) 댄 코츠와 찰스(찰스) 프리먼의 주장은 다음의 글을 참고바람. Dan Coats, “There’s No Cold War with China-and if There Were, We Couldn’t Win,” *Washington Post*, July 28, 2020; Chas(Charles) W. Freeman Jr., “The Struggle with China Is Not a Replay of the Cold War,” Remarks to the Asia American Forum, 25 September, 2020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지역의 내전—가 시작되던 당시,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세계가 신 냉전의 벼랑에 있다’고 경고한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냉전(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 ‘냉전적 언어’로 비난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을 신냉전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맞대응한 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관되게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부국장으로 백악관 무역협상의 실무책임자였던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신냉전의 발발’이라고 자극한 것에 대해, <미국신안보센터(CNAS)> 대표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담당 국방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등은 ‘미-중 대립은 또 다른 냉전(신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 반박하였다.³⁾

학계와 정책커뮤니티에서도 ‘신냉전’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웹사이트에는 ‘신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무 흔한 일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신냉전’이 일상화되었음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덴버그연맹(Vandenberg Coalition)>의 의장인 엘리엇 에이브람스(Alliott Abrams)는 2022년 2월 4일 발표된 시진핑과 푸틴의 공동성명을 ‘신 브레즈네프 독트린(1968)’에 비유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냉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양국의 공동성명을 냉전시기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정당성을 공표한 ‘사회주의 세력권 선언’에 비교하여 ‘신냉전’을 부각시키고 있다(Abrams, 2020).

3) 폰테인과 래트너의 주장은 다음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Richard Fontain and Ely Ratner,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Not Another Cold War: It’s Something New,” *Washington Post*, July 2, 2020.

Ⅲ. ‘신냉전’ 담론과 반(反)담론

1. ‘신냉전’ 담론

‘신냉전’과 관련하여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인 코트킨(Stephen Kotkin)은 매우 예외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냉전(Cold War) 종식은 신기루’라고 비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냉전은 종식된 바 없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철학자나 문인들이 말했듯이 ‘역사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비슷한 운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난시대에 만들어진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들어지고(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코트킨은 ‘냉전종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1989-91년의 사건들’이라 표현하면서, 이 사건들이 야기한 여러 가지 변화—독일통일, 동유럽의 EU 및 NATO 가입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통해 세워진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유럽방면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틱 국가를 포함한 동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에 노출되어 있고, 통일된 독일과 유럽연합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관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아시아방면을 보면, 중국이 과거 소련의 위상으로 격상된 변화 외에,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상태에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대립적이며, 유럽에서의 미소 전략경쟁이 인도태평양의 미중경쟁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지정학적 입지에서 보면, 20세기 역사적 분기점은 ‘1989-91 사건들’ 보다는 오히려 ‘1979년의 사건들’에 있었다는 것이 코트킨의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미중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현대화노선)’의 시작, 아프간내전과 소련의 군사개입, 이란의 이슬람혁명,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주의 개혁’ 등을 포괄하는 ‘1979년의 사건들’이 세계를 더 심도 있게 변화시켰고, 미중경쟁을 비롯한 세계적 차원의 전략경쟁을 발아시켰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냉전종식을 소련의 해체로 환원’시키는 오류,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치명적인 선택을 조장하였다. 냉전종식과 자유주의의 승리를 확신한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이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망라하여 ‘자유주의국제질서’로 세계를 통합하려는 이념적 열정은 결국 지정학적 반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코트킨은 비판하고 있다(Kotkin, 2022, pp.64-79).

냉전사 연구에 전념한 예일대 교수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존스 홉킨스대의 할 브랜즈(Hal Brands)와 함께 발표한 글에서, ‘과거 냉전 후반부에 암 목적 동맹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냉전’을 공표하고 있고, 이러한 도전에 대해 미국이 초당적 합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한 것이다. 다만, 대문자로 표시되는 ‘고유의 냉전(Cold War)’의 새로운 버전(Cold War 2.0)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반적이고 오래된 ‘국제적 전략대결(international rivalries)’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냉전(cold war)’이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개디스는 역사상 존재하는 ‘고유의 냉전’이 전후 1945-47년 사이에 시작되어 1989-91년 에 종식되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에 걸친 냉전에 관한 자신의 연구성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와 할 브랜즈는 과거의 냉전과 현재의 ‘냉전’을 구분하여, ‘특정 적대세력(미국과 소련) 간에 특정 문제들(이념과 세력권)을 둘러싸고 특정 시기(1945-1991)에 벌어진 전쟁(Cold War)’은 이미 종식되었고, 비록 유사점이 있을 지라도, 현재의 것은 과거의 것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부연하고 있다(Brands and Gaddis, 2021, pp.10-21).

냉전과 포스트 소비에트체제 분야에서 인상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컬럼비아 대학의 레그볼드(Robert Legvold) 교수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을 “신냉전(new Cold War)”으로 무심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위기(러시아의 크림병합)> 를 비롯한 현재의 대립양상은 ‘신냉전’이라 부를만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탈냉전으로 새롭게 형성된 ‘러시아와 서구의 관계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였다. 다만, 현재의 위기양상이 ‘20세기 중반에 국제체제를 지배하던 대립(냉전)과 심도와 규모 면에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한 점에서 개디스와 브랜즈의 견해와 유사하다(Legvold, 2014, pp.74-84).

레그볼트는 대표적인 ‘신냉전’ 저널리스트인 루카스(Edward Lucas)나 매किन(Mark Mackinnon)의 견해와 다르게 ‘신냉전’을 규정하고 있다. 《타임즈the Times》의 칼럼리스트인 루카스는 2008년에 이미 ‘신냉전’을 주장하였고(Lucas, 2008), 캐나다 저널리스트 매किन도 2007년에 출간한 책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경쟁을 조명하면서 2000년대 출현하고 있는 ‘신냉전’에 관해 예고한 바 있다(Mackinnon, 2007).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냉전의 근원을 푸틴의 집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레그볼트는 루카스와 매किन 류의 ‘신냉전’ 책임론과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신냉전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탈냉전기 국제체제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 정치적 결정들의 축적물이다. 그는 ‘신냉전’이 시니어 부시(George H.W. Bush)와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정책들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니어 부시가 의회 연설에서 언명한 탈냉전 ‘신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클린턴과 주니어 부시,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시행해온 일련의 정책들이 러시아의 핵심 이익과 충돌—나토의 확장, 동유럽 MD, 일극체제 등—하면서 축적된 결과물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축적물이 크림병합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을 ‘신냉전’의 벼랑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이 선택한 크림(Crimean Pen.)병합은 그에게 ‘신냉전의 순간(new cold-war moment)’이라 할 수 있다(Legvold, 2014, pp.74-84; 2016).

니얼 퍼거슨은 2022년 9월 2일 〈암브로세티 포럼(Abrosetti Forum)〉에서,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가 COVID-19, 전쟁, 인플레이션이 병합된 복합위기로서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팬데믹 위기’라는 3대 위기가 중첩되어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파국적인 국면으로 몽유병자처럼 걸어 들어가고(sleepwalking)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분포(distributions in history), 역사의 순환은 일상적이거나 평범하지 않다.’ 특히, 경제위기와 전쟁, 팬데믹 등이 수반되어 나타날 때 더욱 그러한데, 그의 최근작(《뚝, 재앙의 정치학Doom: the Politics of Catastrophe(2022)》)이 말하듯이, 대참사 또는 ‘운명의 그날’과 유사하다.

퍼거슨은 냉전의 귀책사유를 중국에 돌리는 한 편, 냉전의 긍정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냉전을 선언한 상태라면’이라 전제하면서, ‘우리는 지금 냉전의 시작점에 서있고, 냉전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지나친 자족상태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충격을 주기위해서라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냉전을 치를지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낸 압축의 숲으로 뒤덮인 냉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 속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라는 것이다. ‘타이완 위기’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이 ‘신냉전’을 넘어 ‘열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erguson, 2021, pp.345-377).⁴⁾

2. ‘신냉전’에 대한 반대 담론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 중에서 허버드대 베스트(Odd Arne Westad)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국제체제가 무엇인가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을 지라도, 그것이 냉전(Cold War)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그것이 갈등을 수반한 대결적인 것일 수는 있으나, 불호(不好)하는 모든 것의 공통분모로 “냉전(Cold War)”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강대국 갈등양상을 비롯하여 상호 유사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미 분석과 평가가 잘 알려진 과거의 분쟁(냉전)을 현재의 분쟁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베스타는 현재의 양상을 ‘신냉전’이 아니라 ‘강대국의 열망과 좌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의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은 냉전적 지향이 아니라 과거 냉전의 패배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박탈감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인들이 보기에, 냉전종식 이후 초래된 러시아의 혼란과 쇠퇴의 책임으로부터 미국과 서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옐친 정부시기 미국의 공조아래 진행된 급진적 시장경제 전환정책(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 NATO와 EU의 배타적 정책(나토와 EU의 동진확장

4) 신냉전에 관한 니얼 퍼거슨의 견해는 2022년 9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암브로세티 포럼 Ambrosetti Forum〉에서 CNBC와 한 다음의 인터뷰 내용 또한 참고할 만하다: Karen Gilchrist, ‘Why shouldn’t it be as bad as the 1970s?’: Historian Niall Ferguson has a warning for investors“, CNBC, September 2, 2022.

과 러시아의 배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인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냉전종식으로 상실한 초강대국 소련의 지위와 존중을 그리워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하게 되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지향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통해 체제내적 안정과 국가적 존중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베스타는 해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또한 이러한 ‘강대국 지위의 복원’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전례 없는 경제성장으로 중국이 국제체제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미중갈등의 양상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전략경쟁에서 주니어 파트너였던 중국이 이제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중국몽(中國夢)’으로 표현되는 ‘강대국의 열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결과적으로 냉전(Cold War)이 창조한 세계이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은 이미 냉전을 넘어선 것이다(Westad, 2018).

앞서 인용했듯이, 뮐러도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전형적인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냉전’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세계경제와 중국의 통합 수준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당의 영도력과 체제통합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봉쇄, 디커플링 등으로 표현되는 ‘신냉전’이 초래할 경제적 파국을 자처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시점에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주의를 사로잡는 심각한 국내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은 ‘신냉전’을 의도적으로 주도하기에 회의적인 상황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시진핑정부의 회의테이블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성장을 둔화추세, 인구의 노령화, 노동력 감소경향,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불평등 증가추세, 산업의 과잉생산, 신장위구르 등 소수민족 문제, 홍콩민주화, 대만문제 등 긴급하거나 만성적인 현안들이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몽〉이라는 21세기 ‘중화민족의 대부흥, 중국굴기’를 위한 국가총노선 수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가 국가역량의 적정한도를 넘어 ‘제국의 과도확장(imperial overstretch)’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지도부가 ‘신냉전’을

추동할 수 있는가’하는 반론을 밀러는 제기하고 있다(Mueller, 2020, pp.115-136).

스텐포드대학의 정치학교수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은 신냉전에 관해 전이(轉移)적 관점, 또는 표면상 절충주의(eclecticism)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에서 러시아대사를 역임한 맥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신냉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가 보기에, ‘중국으로 부터의 도전들은 고유의 냉전과 전혀 공통점이 없고, ‘신냉전’ 옹호론자들은 과거 냉전이 초래한 심각한 오류와 막대한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미중관계가 고유의 냉전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미중 간의 ‘강대국경쟁(great-power competition)’을 ‘또 다른 냉전(신냉전)’으로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위협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는 것이자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릇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미중경쟁’에 대해 과거의 냉전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 하면서,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대국 경쟁의 ‘신냉전’으로의 전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자는 실천적인 제안을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맥폴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 냉전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신냉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대국경쟁이라는 양상을 띤 ‘신냉전으로의 전이’라는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McFaul, 2021, pp.7-39; Memarian, 2022).

IV. 냉전적 유사성과 상이성: 이론의 한계

1. 냉전적 유사성

학계와 정책커뮤니티에서 동의하는 역사적 냉전(Cold War)—일반적 용어로서의 ‘냉전(cold war)’이 아니라—은 1945년에서 1991년 사이에 실재했던 미국과 소련, 그리고 양 진영 간의 글로벌한 정치, 이념, 경제적인 속적대결(global rivalry)을 의미한다.⁵⁾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 실험실의 이념형(ideal type)이나

이론적 범주에 속하는 학술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로서의 냉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cold war)’을 냉전(Cold War)이게 하는 것은 과거에 실재한 냉전의 속성들과의 유사성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에 관한 당대의 연구가 냉전의 개념 정의나 이론적 함의와 같은 순수한 학술적 동기와 지적호기심보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서 인류 초유의 지구적 차원의 대결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려는 현실정치적 절박성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향과 역사적 성찰을 추구하였다는 사실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냉전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 보다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신냉전’에 관한 당대의 연구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20세기를 냉전시대라 규정하는데 정치학계나 정책커뮤니티에서 이론(異論)이 없다. 현실주의에서든 자유주의적 접근에서든 1945년-1991년 시기의 국제질서를 냉전의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냉전 개념은 이론상의 조작적 정의나 도구적 설명력을 지닐 뿐 아니라 현실적 적합성과 정책적 소구력을 동시에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쟁 중인 ‘신냉전’은 이론의 적실성은 논하기 전에 정책커뮤니티는 물론이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학자들 간에 합의조차 부재한 상태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Walt)가 주장한바와 같이 기존의 ‘IR 학파가 망가지고 있는’⁶⁾ 현대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신냉전’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일견 허망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신냉전’에 관련된 논쟁들이 이론적이기 보다 정치적 담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모두가 선호하는 선부른 역사적 유추가 재앙적인 외교정책을 초래 한

5) 미 국무부의 냉전Cold War에 관한 개념 정의로 볼 수 있다. National Museum of American Diplomacy, “Cold War Diplomacy(1945-1991),”

<https://diplomacy.state.gov/discover-diplomacy/period/cold-war-diplomacy/>

6) S. 월트에 따르면, ‘이론’은 여전히 정책에 대한 좋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지만, 현재 미국의 IR 학파(교육기관)들은 이론과 현실정책 간 적실한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IR이론은—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범위 이론grand theories에서 동맹, 제재 등을 다루는 중범위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며 이로 인해 각각의 이론의 추종자들은 끝없는 논쟁으로 이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 Stephen M. Walt, “America’s IR Schools are Brocken”, *Foreign Policy*, February, 20, 2018.

다’는 월트의 경고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Walt, 2018, Feb. 20; 2018, Mar. 12).⁷⁾ 대중들의 선호에 기대어 현 상황을 냉전에 쉽게 비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 실재한 냉전의 속성들을 소환하여 현재의 양상이 ‘신냉전’이라 규정할 수 있는지 비교 유추하는 것에 일단 만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다른 시대 여타 국제질서와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다. ‘냉전(cold war)’을 역사적 실재로서의 냉전(Cold War)이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보다도 이념과 이에 따른 진영대결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 대결, 동맹체제, 무기경쟁, 세력권, 헤게모니 추구 등 또한 냉전 시대의 구성요소들이기는 하나, 이러한 속성들은 이전 시대 국제질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는 일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세계질서는 이념적 균열선에 따라 소련과 미국이 주도하는 동과 서방진영으로 양분되었고, 동시에 봉쇄되었다. 지정학적 갈등이나 세력권, 헤게모니 경쟁 등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특성들은 이념적 양극체제에 내장된 채 은폐되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해 세계시장은 서방진영에 국한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은 사회주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자본주의 세계의 전유 메카니즘이었다. 양 진영 간 시장의 완전한 분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물론이고 경제적 상호의존 또한 냉전체제에서 유의미한 주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신냉전’을 냉전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와 특성들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념과 진영,’ 그리고 두 개의 초강대국을 정점으로 분리 봉쇄된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결상태(rivalry)⁸⁾라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 양극체제하의 두 강대국과 각 진영은 체제적 양립불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이념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궁극적인 타도의 대상이자 상호확증파괴의 대상이었다.

7) 월트는, 국제정치이론가로서 역사적 냉전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어떠한 냉전도 아니다.’ Stephen M. Walt, “I Know the Cold War. This Is No Cold War”, *Foreign Policy*, March 12, 2018.

8) “Cold War, International Politics,”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event/Cold-War>

‘신냉전’론자들이 주장하는 현상태의 냉전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냉전의 레토릭’이라는 측면이다. 갈등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들이 상대방을 겨냥하여 쏟아내는 수사적 표현이 과거 냉전적 언사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레그볼드는, 과거 냉전이 태동하던 시기에 소련과 서구의 정치지도자들이 상호 용인할 수 없는 어조로 비난하던 상황과 현재의 대치상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egvold, 2014; Stalin, 1946). 예를 들어,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전승국 간에 정치적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 소련의 최고소비에트 선거 관련 연설에서 스탈린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고, 3월에 미국을 방문한 처칠은 소련을 겨냥하여, ‘유럽대륙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냉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연설을 한 바 있다.

러시아의 크림병합 직후인 2014년 3월 푸틴은 ‘미국과 유럽동맹들이 자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에 경도되어 국제법 보다는 ‘무력의 원칙rule of the gun’에 이끌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는 대서양 세계의 집단군사기구인 나토의 팽창과 중동-북아프리카 분쟁에 무력개입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에 맞서 같은 해 5월 나토의 사무차장은 ‘지금 러시아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적대세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를 수립하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22)〉 또한 중국은 도전세력으로, 러시아는 최대위협으로 적시(揭示)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Robert O'Brien)은 시진핑을 ‘스탈린의 계승자’로 묘사하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주석을 냉전시대가 연상되는 공산당 직책(총서기)으로 호칭하면서 ‘시진핑은 파산한 전체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이고 그의 이념은 중국공산주의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향한 오랜 열망’이라고 폄하하였다(McFaul, 2021).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진핑주석은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할 경우 신냉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 데서

더 나아가,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는 ‘외세가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게 할 것(外勢欺負, 頭破血流)’이라 표현 수위를 높였고,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거론하며 ‘불장난 하면 타죽을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소집한 ‘민주주의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에 대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 할 것’이라 표명하였다(Wang, 2021). 이러한 중국의 외교 레토릭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외교가에서는 ‘전랑(戰狼, wolf warrior)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과거 냉전체제처럼 〈양극체제(bipolarity)〉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해체이후 유럽이 통합(유럽연합EU)되면서 독립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고 러시아가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 한 것, 그리고 인도 등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상승하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 여타 강대국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양극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비록 미국이 군사력, 경제규모, 과학기술수준 등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글로벌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군사력 현대화, 첨단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을 등 중국의 상승 추세로 볼 때, 2030년 경 미국의 GDP를 추월하면서 글로벌 양극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아태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열망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정점과 유사하게 ‘글로벌 열망’을 향한 ‘역량과 의도’를 겸비한 중국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과 대립경쟁하는 양극체제가 출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McFaul, 2021).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시사적 수준에서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담론이 일반적 경향으로 수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강대국 대결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정치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냉전체제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진영의 이원적 대립구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는 전통적인 냉전구조를 연상하게 한다. 실제로 과거 냉전체제를 규정했던 결정적인 요인이자 여타의 강대국 대결과 냉전을 구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이념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현재의 강대국 대결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대결이므로 ‘신냉전’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2021)〉에서 바이든은 ‘세계는 민주주의 대 독재 (autocracy)의 변곡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수호를 선언하였다. 그 근거로 그가 연설에 인용했던 미국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의 조사 결과(〈2022년 자유세계: 권위주의의 지구적 팽창 *Freedom World 2022: The Global Expansion of Authoritarian Rule*〉)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지난 16년 동안 세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Chowdhury, 2020).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투쟁’이라는 담론을 제기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민주주의 구하기’로 대응한 바이든에 동의하여, 존슨은 ‘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사태가 아니라, ‘자유 대 억압’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수반한 ‘유럽전체의 투쟁’에 관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래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주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doktrin (‘바이든 doktrin’)이 되고 있다(Balz, 20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는 정작 ‘신냉전’이라는 개념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나 대중적 으로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대체로 ‘신냉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냉전과의 상이성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신냉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들은 냉전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실체로서 존재한 20세기 냉전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라는 상호 존재론적 부정을 이념적 토대로 하여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양극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글로벌 대결 시스템’을 의미한다. 냉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공산진영’은 세계혁명을, 그리고 ‘자유진영’은 봉쇄 전략을 수립하였다. 과연 현 상황과 국제체제, 그리고 세계질서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가?

미국과 중국의 국가역량을 비교해 보면, 2020-21년 글로벌 GDP에서 미국의 비중은 약 23-25%, 중국은 약 18%, 국방비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미국은 8010억 달러로 글로벌 군사비 지출의 약 38%를 차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930억 달러(14%), 659억 달러(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의 압도적인 격차(5500:350)나 해군과 공군력의 질적 차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규모는 물론이고, 글로벌경제시스템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군사비지출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를 총합(17%)해도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맹국 규모만하더라도, 미국은 나토(30개 회원국)를 제외하더라도 4개 대륙에 걸쳐 19개의 공식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은 북한이 유일하다.

더욱이 냉전해체이후 미국의 동맹네트워크가 현저히 확장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토와 더불어 과거 냉전시대 양극체제의 군사적 토대를 이루던 공산진영의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 대부분이 현재 나토에 가입한 상태이다. 언급한 여러 지표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강대국 대결구조를 ‘양극체제’라 규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19세기 서구 열강 간의 세력구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영제국은 세계제국으로서 식민지 영토나 경제규모, 그리고 해군력 등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70-80년대 영국은 세계총생산량의 약 21%를 점유하였고 제국의 정점기에 세계 육지면적의 1/4, 인구의 1/6를 지배하였다(Matthews, 2014). 당시 차상위국이던 미국은 총생산량에서 영국을 근접 추격하기 시작하여 1900년대 초반에 양적 질적으로 세계 수위를 탈환하였고, 육군을 비롯한 군사력의 상승도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역사는 이 시기를 ‘양극체제’로 기록하지 않는다. ‘일초다강(一超多強)’이나 ‘양초다강(兩超多強)’체제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더욱 근본이 없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돌연변이형 극체제가 개념 정의될 공간은 없다. G2라는 용어가 ‘양극체제’로 대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는 부분적으로 양대 동맹세력, 풀어쓰면 〈삼국동맹(Dreibund)〉과 〈삼국협상(Triple Entente)〉이 경합한 전형적인 다극체제였다. 같은 논리로,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총생산량

(global output)의 약 50%를 점했던 1950년대도 ‘일극체제’가 아니라 ‘양극체제’로 정의된다는 사실은 ‘극체제(polarity)’가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해 준다. 근대적 국제질서가 형성된 베스트팔렌체제 수립 이래로 유일한 양극체제로 정의되는 20세기 냉전시대는 경제와 군사 뿐 아니라 이념과 문화, 글로벌 동맹지형,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다시 말하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총괄한 모든 면에서 국제체제가 양 진영으로 분리 봉쇄되어 대등하게 경합한 ‘예외적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독특하고 예외적인 전쟁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념’전쟁이라는 차별성 때문이다. 1946년 2월, 스탈린이 최고소비에트 선거 연설(Stalin, 1946, pp.19-44)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한 사례’로 규정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위기(일반위기, general crisis)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세계내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파국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소련의 역대 지도부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어 자본주의세계가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혁명을 지원하였다.

미국 또한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를 전망하였다. 1946년 2월,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이 국무부에 보낸 장문의 전문(“Long Telegram”)과 1947년 7월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실린 〈소련의 행동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라는 제목의 무명의 기고문(“X article”)에서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성향’에 경각해야할 절박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봉쇄정책(Containment)’을 제안하였다(Kennan, 1947, pp.566-582). 향후 ‘냉전의 설계자’이자 봉쇄정책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된 케난은 두 문서에서 ‘공산주의체제의 내적 모순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련은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인 봉쇄’를 제안하였고, 1950년 4월 7일, 국가안보회의의 문서 〈NSC-68〉로 공식화되었다. 요약하면 미국과 소련 모두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공존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인 면에

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제공존이 불가능한, 궁극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었다. 미국에게 소련은 ‘악의 제국’이었고 소련에게 미국의 ‘제국주의의 화신’이라는 서로에게 ‘선과 악의 상징’이었고 반명제(antithesis)였으므로 양 진영에 속한 국가들은 선택의 자율성이 부재하였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대립과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충돌’을 본질로 한 ‘비 이념적 전략 갈등’, 또는 ‘헤게모니 경쟁’이라 할 수 있다(ЧЖе, 2023, pp.244-253). 베스타가 주장했듯이, ‘이념은 더 이상 결정요인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일본, 인도 등 여러 주요국들 간에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보스포럼>을 비롯하여 여러 제도적 기제를 통해 시진핑주석은 자유무역을 비롯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존중을 표명한 바 있고, 세계혁명을 지원하거나 민주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도 않는다.

러시아의 정치과정에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속성들이 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정체제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국가들을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시기와 같은 이념적 대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이념적 경향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추세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화민족의 부흥(national rejuvenation)’은 민족주의의 발흥의 대표적인 표현태인데, 떠오르는 강대국의 ‘헤게모니적 열망’일 수는 있으나 냉전적 이념은 아니다.

이 외에도, ‘신냉전’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유형과 요소들이 있으나 간략하게 언급하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쇠퇴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세계경제의 상호연관관계가 냉전시기와 같이 양 진영으로 분리되거나 봉쇄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재편 또는, 디커플링이 냉전시대의 ‘봉쇄’처럼, 양 진영의 완벽한 분리로 귀결될 가

능성은 희박하다. 2023년 초, EU에서 시작한 ‘디커플링’ 거부와 ‘디리스팅’ 요구를 바이든 정부가 결국 수용한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중국의 영향력의 한계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강대국 중국의 도전이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글로벌’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냉전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념’의 차원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나, 중국식 발전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민주주의나 미국의 이념에 도전할 만한 위협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체제이념이나 발전모델이 시장경제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도 냉전시대의 이념에 비교열위에 있다. 냉전시대의 사회주의와 소련 공산당의 이념은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세계관이었고, 대안적 문명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이념’은, 패러다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소프트파워’ 수준에서 글로벌한 영향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현재로서는 개념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V. ‘신냉전’ 담론의 ‘프리퀄(prequel)’: ‘승리주의’ 담론과 ‘차가운 평화’

‘신냉전’ 담론의 위험성은 전쟁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신냉전’의 결과는 승전국과 패전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띠게 된다. 20세기 냉전의 종식 방식에 따라, ‘신냉전’의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자신의 이념과 국제질서를 다시 한 번 강제할 것이다. 이의 결과는, 과거 탈냉전기의 전례에 따르면, 좌절된 패전국은 또 다시 국제질서의 불안정의 근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 세계정치의 전략적 경쟁과 대결양상을 ‘신냉전’이라 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승리주의’ 담론은 20세기 냉전 종식의 방식에 연원하고 있으므로 ‘신냉전’ 담론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에서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세계질서라는 ‘대전략’에서 미국의 현실정치에 지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불어넣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소련해체 직후 《포린어페어즈》에 게재한 글(Brzezinski, 1992, pp.31-49)에서 ‘〈냉전〉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고 개념정의 하였다. 프로이센의 군사이론가이자 장군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어록(《전쟁론Vom Kriege》)을 차용한 말이다.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비록 ‘다른 수단(비살상적인)’에 의한 것이었을 지라도, ‘〈냉전〉은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평가와는 다르게, 〈냉전〉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몰타선언〉 등의 일련의 조치가 아니라 ‘소련의 해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식’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브레진스키에 따르면, ‘〈냉전〉을 전쟁이라 지칭할 수 있다면, 전쟁의 일반적인 결과물로부터 도출되는 용어법에 따른 평가로 냉전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와 패배, 그리고 항복과 전후처리’라는 용어로 냉전과 탈냉전을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견해였다. 그는 ‘냉전은 한 쪽의 승리로 그리고 다른 측의 패배로 끝났고, 이러한 현실은 거부될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더 나아가, 브레진스키에 있어서 〈냉전〉 승리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승리로 해석되었다. ‘1815년의 나폴레옹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독일제국에 대한 1918년의 승리보다 더한, 그리고 나치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 보다 더 결정적이고 일방적인 승리’였다.

냉전의 종식의 범례에는 〈30년 전쟁〉의 종전 방식이 제외될 것이었다. 17세기 유럽은 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의 결과 ‘종교적 대타협’의 방식으로 해결하여 근대적 주권국가체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종전조약의 명칭에 따라 ‘베스트팔렌 평화체제(Peace of Westphalia)’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작동원리는 ‘군주는 자기영토의 종교를 결정한다(cuius regio, eius religio)’는 ‘국가주권’의 원리이자, ‘대타협’의 정신이었다. 이 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분리되지 않는, 승자가 패자를 배제하지 않는, 킨시저식으로 말하면, 국가 간 ‘균형(equilibrium)’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세계를 의미하였다. 브레진스키는 ‘베스트팔렌의 평화’는 냉전의 종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기오(누군가의 영역은 그의 종교의 영역)’의 원칙을 냉

전의 ‘종전처리’ 방식에서 배제하였다.

브레진스키가, ‘교의적 관점으로 보면, 패전국의 이념이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냉전해체의 소산이 ‘베스트팔렌의 평화’가 아니라 1815년(나폴레옹전쟁 종전)이나 1945년(제2차대전 종전)에 더 가깝고, 패배한 제국이 해체 과정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1918년(제1차대전 종전)과 유사하다’고 비유한 것은 냉전종식이 소련의 패전이었음을 역사적 전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전의 전쟁들의 종식에서처럼 냉전의 종식은 ‘항복의 순간(moment of capitulation)’이었던 것이다. 그가 판정한 냉전의 승리는 그가 몸담았던 카터정부의 인권정책과 후임 레이건정부의 군비경쟁(전략방위구상, SDI)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브레진스키류의 승전의 담론은 이후 국제정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그도 인정할 바와 같이, 폴 케네디의 ‘제국의 과도팽창’ 개념을 적용하여, ‘소련의 과도팽창(Soviet overstretch)’이 냉전의 최종 단계로 진입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한 해석이 오히려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시작을 알렸던 〈긴전문(Long Telegram)〉에서 주목하였듯이, ‘소련은 체제 내적인 문제로 무너질 것이므로 서구는 체제의 내구성과 매력을 높이면서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시한 G. 케난의 해안이 결과적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다.

브레진스키 류의 ‘냉전승리의 신화’는 이후의 탈냉전 질서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냉전해체이후 미국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와 ‘글로벌 콘도미니엄’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으로 기대한 러시아는 ‘주니어 파트너’로 전략한 것에 좌절하였고,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 판정된 것에 반발하였다(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17, pp.24-25). 냉전종식으로 “이제, ‘어떤 평화인가’가 역사 어젠다의 핵심질문이 되었다”고 단언한 브레진스키의 희망을 넘어서, 불행히도 도래한 평화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였다. 냉전의 해체의 결과물은 애초 기획자의 설계대로였다면, 17세기 구시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제체제를 촉조한 맥락에서 ‘베스트팔렌적 평화’여야 했을 것이다. 참언하면, 브레진스키는 냉전종식과 유사한 전례로 1815년의 〈비엔나회의〉를 거론하면서도 실제로는 〈비엔나회의〉와는 상반되는 담론과 처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엔나회의〉를 지배한 원칙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프랑스를 전후 신질서에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전후질서인 〈유럽협조

체제》의 동등한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브레진스키의 탈냉전 처리원칙과 상이하다.

또 다른 전례로 예시한 1918년 종전과 〈파리평화회의(베르사유회의)〉는 탈냉전처리방식과 탈냉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전거로서 적절치 않다. 〈파리평화회의〉는 전후처리에서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을 부과하여 패전국의 상실감을 부각시킨 실패한 전후처리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리평화회의〉에 영국대표로 참석한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1919)》에서 전후처리에 있어서 〈파리평화회의〉의 잘못된 결정이 유럽의 경제와 평화에 끼친 파국적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 평화는 ‘베르사유의 평화’보다는 ‘베스트팔렌의 평화’나 ‘비엔나의 평화’가 더 적절한 역사적 전거였을 것이다.

냉전해체의 기획자였던 고르바초프는 오늘날 ‘승리주의적 관점’의 후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유흔처럼 남겼다. 냉전종식을 선언한 〈몰타선언〉 30주년이던 2019년 독일의 언론매체 〈벨트암존탁*Welt am Sonntag*(world on Sunday)〉과의 인터뷰(2019년 10월 21일자)에서) 고르바초프는 당시를 회고하며 냉전종식이 동서 양 진영의 ‘공동의 승리’였음을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냉전의 종식은 모두의 승리였으나, 서방의 정치인들, 무엇보다도 미국이 스스로 승자임을 선언하고 자화자찬’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냉전종식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와 정치에 어떠한 후과를 남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에 따르면, 승전담론에 따라, ‘서방(미국)은 모든 것이 허용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일방주의)’하였다. ‘유엔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발동하였고 국제조약을 위반하였으며, 자신의 조건들을 부과’하였다. 새로운 세계에 부합하는 신질서에 조응하려면 ‘유럽에서 새로운 탈냉전 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했으나, 구질서의 상징인 나토를 확장하는 과거 경로의존성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서방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통과의례(Les Rites

9) 러시아 〈타스통신〉의 다음의 인용 기사를 참고하였음: “Горбачев считает, что окончани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было общей победой(“고르바초프가 생각하기에, 냉전종식은 모두의 승리”),” ТАСС, 22 октября 2019.

de Passa)’에 성공하지 못하였는바, 이것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진단하였다.

고르바초프가 목도한 탈냉전 세계는 1918년의 ‘파리의 평화’에 가까웠다. 러시아인들이 보기에 당시의 해체된 독일제국처럼 러시아는 배제되었고, 강대국의 지위는 손상되었다. 그레이엄 엘리슨과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이 적시하였듯이, ‘러시아인들에게 강대국의 지위는 미국인들처럼 국가정체성’과 같은 것이다(Allison and Blackwill, 1991, pp.77-97).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정체성 존중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체성에 상처를 받은 강대국이 국제질서에 가할 반작용의 결과물이다. 프랑스 어느 정치사회학자가 은유적으로 표현했듯이, ‘상처받은 야수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Poulatzas, 2000, p.205).

VI. 결론

이상에서 ‘신냉전’ 담론과 반론을 비교한 이유는, 학술적 목적 이 외에도, ‘신냉전’ 담론이 기정사실화되어 글로벌한 차원에서 관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하고자함이다. 무엇보다도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실제적 진실과는 별개로 일상에서 관철되어 기정사실화 될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의 결과가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질병이나 재난처럼 어떤 현상이나 증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르는 처방전이나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하게 되듯이 전략이나 정책결정도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만약 진단이나 재난예측이 오류일 경우 그에 따른 처방전이나 응급매뉴얼은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자기예언으로서 ‘신냉전’이 실현되면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작동할 것이다.

‘신냉전’이라 진단이 내려지면, 과거 〈냉전〉이 축적한 전통적인 처방전이 따라 올 것이다. ‘신냉전’의 처방전에는 전통요법에 따라 ‘봉쇄’라는 성분이 주요 약재가 될 것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대항진영의 결집이라는 매뉴얼이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디커

플링’, 그리고 ‘글로벌공급망재편’ 등은 글로벌 차원의 ‘붕쇄’로 상승될 것이고 여러 유형의 경제제재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요원하긴 하지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원적 가치에 기반한 대항진영이 수립되어 정치 군사적 블록화가 현실화되면 ‘신냉전’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핵전쟁의 위협이 글로벌 어젠다의 최상위에 복귀하게 되면 ‘신냉전’은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냉전 담론’의 실현이 위험하고 불길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영’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국가들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처럼 이 처방전이나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디리스킹, 안보적으로는 디커플링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현실화되면서, 남과 북이 ‘신냉전’ 매뉴얼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북중러 삼각안보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레짐은 아니지만, ‘한미일삼각협력’이 ‘전략적 삼각체제(strategic triangle)’로 진화할 경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하여금 ‘대항삼각체제’로의 이행을 강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는 ‘신냉전의 함정(new-cold war trap)’에 빠질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다. 양극체제하의 두 강대국과 각 진영이 체제적 양립불가능성을 본질로 하여 이념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궁극적인 타도의 대상이자 상호확증파괴의 대상이었듯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신냉전’이 예언적으로 충족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대중들 사이에서 냉전 매뉴얼이 작동하면 냉전적 확증편향성에 따라 남과 북은 상호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환원될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진영 간 상호 격리되어 있어서 ‘붕쇄’의 영향이 ‘자유진영’내에서는 미미했던 과거의 냉전체제와는 전혀 다르게 현재 글로벌 상호의존관계의 범위나 심도는 매우 넓고 깊으므로 ‘신냉전’ 매뉴얼이 작동할 경우 글로벌 차원의 충격은 심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로버트 레그볼트나, 존 루이 개디스 등 ‘신냉전’ 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과거의 <냉전>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역사로 부터의 통찰’에 기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인류에게 ‘냉전’의 불행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신냉전’ 담론에 대

한 학문적인 동의와 반박을 넘어서 현실적인 리스크에 주목하여 현재의 글로벌 위기에 대한 냉철하고 성찰적인 분석과 진단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Ferguson, Niall. (2021). *Doom: the Politics of Catastrophe*. New York: Penguin Books.
- Lucas, Edward. (2008). *The New Cold War: Putin's Russia and the Threat to the West*. London: Palgrave Macmillan.
- Mackinnon, Mark. (2007). *The New Cold War: Revolutions, Rigged Elections and Pipeline Politics in the Former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 Poulatzas, Nicos. (2000).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Verso.
- Stalin, J.V.. (1950). “Speech Delivered by Stalin at a Meeting of Voters of the Stalin Electoral District Moscow(February 9, 1946)”. *the Pamphlet Collection, J. Stali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17). *민주주의와 평화, 코리아컨센서스*.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
- Abrams, Elliott. (2022, March 4). “The New Cold War”, *CFR*.
- Allison, Graham and Blackwill, Robert. (1991). “America’s Stake in the Soviet Future.” *Foreign Affairs* 70(3).
- Ashford, Emma and Kroenig, Matthew. (2020, July 31). “Is This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with China?”. *Foreign Policy*.
- Brands, Hal and Gaddis, John Lewis. (2021).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100(6) November/December.
- Brzezinski, Zbigniew. (1992). “the Cold War and Its Aftermath”. *Foreign Affairs* 71(4) Fall.
- Chandler, Clay and Barrett, Eamon. (2018, October 6). “The US-China Cold War Has Begun”. *Fortune*.
- Chen, Xiangmiao. (2020, August 17). “The US ‘New Cold War’ Battle Cry in the South China Sea”. *Diplomat*.
- Chowdhury, Debasish Roy. (2020, December 10). “Joe Biden’s Democracy

- Summit Is the Height of Hypocrisy”. *Time*.
- Helberg, Jacob. (2020, August 12). “In the New Cold War, Deindustrialization Means Disarmament”. *Foreign Policy*,
- Freeman Jr., Chas(Charles) W.. (2020, 25 September). “The Struggle with China Is Not a Replay of the Cold War,” Remarks to the Asia American Forum, 25 September.
- Freeman Jr., Charles. (201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Game of Superpowers,” Remarks to the National War College Student Body, Washington, DC, February 8.
- Kaplan, Robert. (2019, January 7). “A New Cold War Has Begun”. *Foreign Policy*.
- Karabell, Zachary. (2020, August 14). “There’s No Cold War with China”. *Foreign Policy*.
- Kennan, George F.(by X). (1947). “The Source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July.
- Kotkin, Stephen. (2022). “The Cold War Never Ended: Ukraine, the China Challenge, and the Revival of the West”. *Foreign Affairs* 101(3) May/June.
- Legvold, Robert. (2014). “Managing the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93(4) July/August.
- Matthews, Chris. (2014, October 5). “Fortune 5: The Most Powerful Economic Empires of All Time”, *Fortune*.
- McFaul, Michael. (2021). “Cold War Lessons and Fallacies for US-China Relations Today,” *Washington Quarterly* 43(4), Winter.
- Memarian, Omid. (2022, August 12)“This ‘New Cold War’: Michael McFaul on Russia, the Middle East and American Interests,” *DAWN*(dawnmena.org).
- Mueller, John. (2020). “‘Pax Americana’ Is a Myth: Aversion to War Drives Peace an Order”. *Washington Quarterly*. 43(3).
- Sempa, Francis P.. (2020, May 27). “Forget about a ‘New’ Cold War, The Old One Never Ended”. *Diplomat*.
- Stalin, J. V.. (1946). “February 09, 1946 Speech Delivered by Stalin at a

- Meeting of Voters of the Stalin Electoral District, Moscow”,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Wilson Center.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speech-delivered-stalin-meeting-voters-stalin-electoral-district-moscow> (2023/09/06)
- Walt, Stephen M. (2018, February 20). “America’s IR Schools are Brocken.,” *Foreign Policy*,
- Walt, Stephen M. (2018, March 12). “I Know the Cold War. This Is No Cold War”. *Foreign Policy*.
- Wang, Yi. (2021, December 03). “Resist the Cold War Mentality and Defend True Democr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Westad, Odd Arne, (2018, March 27). “Has a New Cold War Really Begun?”. *Foreign Affairs*,
- Balz, Dan. (2022, March 1). “‘We Will Save Democracy’: Biden Offers Hope to Resilient Ukrainians in War with Russia,” *Washington Post*,
- Brands, Hal. (2019, January 14). “America’s Cold Warriors Hold the Key to Handling China”, *Bloomberg*,
- Coats, Dan. (2020). “There’s No Cold War with China-and if There Were, We Couldn’t Win”. *Washington Post*, July 28.
- Ferguson, Niall. (2019, December 2).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New York Times*,
- Fontain, Richard and Ratner, Ely. (2020, July 2).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Not Another Cold War: It’s Something New,” *Washington Post*.
- Gilchrist, Karen. (2022, September 2). “‘Why shouldn’t it be as bad as the 1970s?’: Historian Niall Ferguson has a warning for investors”. *CNBC*.
- Mayers, Steven Lee and Mozur, Paul. (2020, July 14). “Caught in ‘Ideological Spiral’, US and China Drift toward Cold War”. *New York Times*.
- Ramani, Samuel. (2016, November 09). “Robert Legvold on the New Cold War, Interview with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and Leading Russia Scholar”. *Huffpost*.

Tharoor, Ishaan. (2018, October 10). “Under Trump, US Enters a New Cold War with China”. *Washington Post*.

“Горбачев считает, что окончани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было общей победой(“고르바초프가 생각하기에, 냉전종식은 모두의 승리”),” *TACC*, 22 октября 2019.

Чже, Сун Хун. (2023).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в АТР: Пекин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Вашингтоном.” *Analyses & Alternatives(A&A)* 7(1).

Manuscript: Sept 15, 2023; Review completed: Oct 01, 2023; Accepted: Oct 19, 2023